

개혁도 민생도 지지부진...여권텃밭 호남민심이 움직인다

문 대통령 긍정평가 일주일만에 14.1%P, 민주당 지지율 8.6%P 하락
호남 현안 수수방관, 충청·영남권 집중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도 영향
문재인 정부 핵심 기반...이탈 가속된 민주당 보궐선거·대선 구도 흔들

호남 민심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큰 크리트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호남 민심마저 점차 등을 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7.4%로 지난주에 비해 6.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57.4%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29.7%로 전주의 34.1%에 4.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호남지역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 14.1%포인트(72.1%→58%)빠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8.6%포인트(56.7%→48.1%) 하락하면서 과반 지지가 붕괴됐다. 정치권에선 호남 민심을 주목하고 있다. 호남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 이반이 현실화된다면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 또 호남 민심 이반은 수도권 향우들에

게도 영향을 미쳐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도 여권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시켜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 구도마저 뒤엎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광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혁 입법 부진'이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정부 여당에 힘을 싣는 것은 물론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를 하락의 원인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분석이다. 개혁 입법 부진보다는 추미애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 등 그동안의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보여왔던 역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것인데 국민적 지지와 의석수만 믿고 오

만하고 안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 부동산 정책도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인데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금 부동산 확대 등에 따른 적절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장 저항이 심한 세금 폭탄으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호남 현안에 대한 여권의 미온적 태도도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극적 해법 마련보다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부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법 등을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나서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물 건너가고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에 집중되는 문

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확산은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왔으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민심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서민,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여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방역이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 일정을 포함한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 국회의원들은 개혁 입법 부진을 여권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편적인 분석"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여권의 역량 부족이라는 점에서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 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부동산 및 민생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8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합의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제1전투비행단 손잡고 군공항 공군 훈련기 소음 줄인다

전국 첫 '소음피해 저감 업무협약' 모의훈련 확대 등 저감 대책 추진
광주 광산구에 자리잡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광주시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전국 군 공항시설 중 처음으로 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손잡고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훈련시간 조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공항 일대 시민 고통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은 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군항공기 소음 민원이 급증하자, 이 시장이 공군제1전투비행단장과 면담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본격화됐다. 협약에 따르면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항공기 소음 민원해소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광주시는 공군제1전투비행단의 소음저감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또 소음저감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모의훈련 확대, 야간훈련 최소화, 이착륙 절차 개선 등 소음 저감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관·군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광주는 현재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정도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광주공항 평균 소음도는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은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가장 낮은 양양공항(59웨클)보다 26웨클이나 높다. 인천공항도 69웨클 수준이다. 특히 광주 송대동 일대는 90웨클, 우산동 일대는 88웨클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은 "훈련방법을 개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야간비행 최소화, 작전 스케줄 조정 등 공군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소음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군공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공항 이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함께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증세 조류독감,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AI에 뚫린 전남 오리농가 발동동 사람의 관찰로는 감염 판별 못해
방역당국·농장주들 방역에 사활

"배설물도 먹이 섭취도 폐사도 이상이 없는데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라니 답답하고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증세를 동반하지 않는 '무증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습격으로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 전남의 농가들이 떨고 있다. 지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철새가 날아든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는 최소한의 바깥 생활만 하고 농장 방역에만 전념했지만, 김새를 눈치챌 기회도 주지 않고 맥없이 농장이 AI에 뚫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혹시 모를 인체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축(감염 의심 가축)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발생 농장 3km 이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장 측 과실이 없을 경우 시가의 80%를 보상하지만, 농가 피해 복구에는 어렵다는 수준이다. 살처분과 매몰, 소독 등 방역 작업을 마치고 상황이 잠잠해 질 때까지 최소 3-6개월간 새끼 닭·오리를 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AI 확진 판정 농장뿐 아니라 주변 농장주들에게도 피해가 미친다는 점에서 지난 5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주는 "죄인이 된 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영암지역 농장주 A씨는 8일 "닭은 폐사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증세가 확인한데 오리는 전혀 증세가 없다. 오리 사육 농가들이 오죽하면 '오리만 사랑하는 독감'이라고 부르겠느냐"며 "내 농장뿐 아니라 오늘 의심축이 발생한 나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서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하기 힘들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농장주 A씨는 "육안으로 전혀 알 수가 없다. 폐사체가 늘어나거나, 물과 먹이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체중이 줄지도 않는다. 배설물 색도 이전과 똑같다. (오리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신고라도 하겠지만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농장 출하 전 검사, 도축장 검사 등 검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지 사람의 관찰로는 도저히 감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게 농장주들의 전언이다. 농장주 A씨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술집, 밥집을 다니지만, 닭·오리 농장주들은 출성, 밥집을 다니지만, 닭·오리 농장주들은 출성도래지는 물론 전통시장 등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에만 전념해왔다"며 "그런데도 조류 독감 발생을 막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전남도 동물방역 공무원들 역시 농장주들과 마찬가지로 무증세 AI라는 점을 적극 알리며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역 전남에서 미처 손 써볼 틈 없이 AI가 퍼질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이다. 전국에선 울릉도 고병원성 AI가 정읍(육용 오리), 경북 상주(산란계), 경기 여주(산란계) 등 4개 농장에 걸쳐 발생했다. 전남에선 지난 5일 영암 시종 오리농장의 확진에 이어 8일에는 나주 오리 농장에서 의심축(항원 검출)이 확인됐다. 전남에선 오리 사육 농가 236곳에서 402만여수를 사육 중이다. 전국 900여만수 대비 44.7%다. 단 3농가를 제외한 200농가(367만수)가 다슬, 제이디팜, 사조원 등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다. 사군별로는 나주시 61개 농가 105만수, 영암군 38개 농가 71만수, 장흥군 17개 농가 26만수 등이다. 닭은 401농가에서 2571만수를 사육한다. 전국 1억9400만수 대비 11%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Tomorrow Plus

사학연금이 만들어나가는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온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
사학연금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 유휴공간 무상제공으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지원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최초 수유실 지역주민 개방
-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
- 인재양성을 위한 노사공동 장학금 지원
- 지역 초·중·고 학생 경제·금융교육 제공

TP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74년 설립된 준정부 기관

퇴직연금서비스, 유족연금서비스, 생활자금·행복나눔 대여서비스, 재해보상제도 운영